

루이비통, 가장 많이 위조되는 상표

특허청은 검·경, 자치단체와의 2002년도 위조 상품 합동단속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많이 위조되는 상표를 선별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을 발간·배포하여 외국 저명 위조상품의 범람을 억제할 계획이다

2002년도에 가장 많이 위조된 상표순위는 루이비통(프랑스), 폴로(미국), 샤넬(프랑스), 페라가모(이태리), 구찌(이태리), 나이키(미국), 프라다(룩셈부르크), 아디다스(독일), 까르띠에(네덜란드), 푸마(독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조 상표 1위〉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상표명	베스키로빈스	아디다스	폴로	아디다스	루이비통
적발수량(점)	60,000	18,035	7,881	10,293	3,366
전체대비 비율(%)	16.5	28.3	21.4	30.9	15.2

한편 품목별로는 총 22,133점 중 의복류가 8,817점(39.8%), 장신구류 5,600점(25.3%), 가방류 4,147점(18.7%) 그리고 시계, 신발 등 기타 품목이 3,569점(16.2%)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위조상품의 모방 추이를 보면 루이비통, 아디다스, 폴로, 샤넬 등의 외국유명 상표의 위조 순위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변함에 따라서 위조상품의 상표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유명상표를 모방하는 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이고 국제적인 통상마찰을 야기시켜 중국적으로는 국익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특허청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또한 외국 모방상품을 만들지도 말고, 소비자도 사지도 말아야 될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특허청〉

사스 특허 ‘글로벌 경쟁’

‘사스’ 관련 연구에 대한 특허권 신청을 놓고 전세계 제약회사와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저널은 한쪽에선 사스의 공포가 세계 전역을 휘감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민간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백신, 연구실험, 제약부문 등 큰 이권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허권 신청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열기가 윤리적으로 온당한 행위인지에 적지않은 시선이 모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스 바이러스와 관련해 특허권을 신청한 곳은 캐나다와 홍콩의 연구소와 대학,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암 연구소 산하에 있는 유전공학센터는 사스 질병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처음으로 해독한 곳으로서 이 연구소는 최근 유전자 해독에 관해 미국에 조건부 특허권을 신청했다. 이는 사스 바

이러스에 대한 계놈의 상업적 권리를 두고 미국과 한판 힘겨루기를 할려는 준비중에 있다.

또 홍콩 대학교의 마릭 페이지스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지난 3월 최초로 사스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성공해 현재 몇몇 기업들과 특허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CDC도 사스 바이러스와 관련해 최소 1건의 응용분야의 특허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스 바이러스의 진단과 예방백신, 치료제 시장에는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몇몇 벤처기업들에 뒤를 이어 로슈와 애보트 래버러토리스, 머크, 아벤티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들도 대거 가세해 경쟁양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사스 바이러스 퇴치노력이 성과가 없거나 사스가 유행성 독감처럼 계절적으로 반복될 경우 거대한 시장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스의 충격이 앞으로 완화될 경

우 이 부분 시장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널은 전했다.

저널은 이처럼 특허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에서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성과에 대해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나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1955년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구제하는데 기여한 조나스 살크는 '태양도 특허신청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학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한 지나친 상업적인 이용에 경계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스관련 특허 신청이 붓물을 이룬다 해도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결국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일부 극소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아카시아 리서치의 아미트 쿠마르 회장은 '특허권은 로또 복권과 같다'며 이 같은 특허 열풍을 꼬집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지재권 판정' 안심할 때 아니다

해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통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적재산권 국가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감시대상국(WL: Watch List)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감시대상국이란 지재권 보호 수준이 미국에 치명적인 손실을 미칠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가리킨다. 이번 등급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일부의 우려처럼 한단계 강화된 우선감시대상국(PWL) 판정을 받을 뻔한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USTR는 이번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초에 설립한 정보통신부 산하 특별수사팀의 권한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올 가을에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재검토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재조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당장에 무역상의 보복이나 조사 등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언제든

양국간 협상 테이블에서 지재권 보호 문제를 압박용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실제로 무역협회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다가올 올해 한-미간 양자협상에서 미 행정부가 지재권 보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안이 된 위피 단말기 부문도 미국의 주시 대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경고와는 달리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정부의 대응정책은 미진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권한 강화를 위해 체신청 지재권 침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영상품 수입시 저작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음비법 개정도 끝을 알 수 없는 진행형이다.

매년 지재권 판정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불공정 무역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시불란한 정부의 대처가 어렵다.

출처 전자신문

유럽 과학자들, 유럽 SW 특허 반대

‘대기업만 살찌우는 소프트웨어 특허체계에 반대한다.’

유럽의 유명 과학자들이 유럽연합(EU)의 소프트웨어 특허체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C넷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 과학자 31명은 유럽위원회(EC)가 추진중인 소프트웨어 특허체계가 미국식이어서 대기업들의 이익에만 부합한다며, 개정되는 유럽의 특허체계를 미국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과학자들은 ‘EU의 특허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데이터구조 및 정보처리 방법 등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 남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은 특허에 대한 구성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최근 들어 웹사이트 쿠키나 서핑,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특허권 논란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며 ‘향후 특허를 둘러싼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들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아 중소기업들은 결국 로열티를 낼 수밖에 없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같은 체제는 쓸모없는 수준을 넘어 역내 IT업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개정안에서도 현재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역내 대기업들의 지적재산권(IP) 과점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과학자들은 현행 특허체계의 개선과 함께 EC제안 폐기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새로운 단체인 ‘무료정보인프라기금(FFI)’을 설립키로 했다.

유럽 과학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지역 IT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동안 아시아는 물론 미주 중소 IT업체들도 대기업들이 IP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확대해 자신들의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EC는 현행 EU의 소프트웨어 특허법 체계는 역내 국가들간 해석이 서로 달라 국가간 상충되고 유럽 IT 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서 단일한 EU 소프트웨어 특허체계 마련을 추진중이다.

출처 전자신문

LED 특허 경계령

국내 발광다이오드(LED)업계가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색 LED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니치아사가 에피스타·테코아·사우스에피 등 대만 LED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특허침해 소송을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한국 시장으로 특허 공세가 확대될 것이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같은 니치아의 대만시장을 겨냥한 특허 공세 움직임은 최근 자국내 휴대폰 및 LCD 광원용 LED 시장 특수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는 대만·한국·중국 등 후발 경쟁국 견제전략의 '신평탄'으로 해석된다.

우선 대만 현지 및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무섭게 LED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대만 업체들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서는 한국시장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미 니치아의 백색 LED특허 공세는 지난해 미국 크리·오슬람·도요다 고세 등 선발업체간 '상호특허인정(Cross License)' 체결 전까지 벌어진 치열한 힘겨루기식 분쟁을 통해 일찌감치 예견돼왔던 일로, 국내 대기업계열 LED 소자 업체들은 물론 패키징 업체들도 그동안 니치아사의 특허권을 우회할 수 있는 대응 특허를 출원하거나, 준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치아의 백색 LED에 대한 특허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아

직 미지수라는 것이다.

일본 니치아사가 현재 일본·미국·유럽·대만 등지에 특허권을 보유한 백색 LED 제조기술은 청색 LED칩에 형광안료(염료)를 입혀 색채를 변환해주는 재료 및 제조방법으로, 현 단계에서 백색 LED를 상용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된 방법으로 평가된다. 국내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백색 LED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특허청도 니치아사가 출원한 백색 LED 특허권 범위 중 형광체를 입혀 색채를 변환해주는 제조기술 부문이 이미 형광등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원천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이에 대한 특허를 내주지 않았으나, 니치아사가 이에 불복, 또다시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LED산업이 이제 막 시작단계인 상황에서 특허 분쟁이 발발할 경우, 기업당 수십억~수백억원 가량의 막대한 보상손실은 물론 국내 산업 자체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에피·소자·패키징·모듈업체들이 협심해서 원천기술 개발·기술교류 등 시급히 공동대응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백색LED는 기존 녹색·청색 LED에 비해 한단계 진일보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현재 휴대폰 키보드 및 LCD·자동차용 전장품 광원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데다, 향후 조명등 시장까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LED의 차세대 주력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